민주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본격화

통합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7·6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쇠고기 재협상 정국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 계파간의 기득권 나눠먹기, 대의원 선정방식에 반발한 영남권의 보이콧 움직임마저 나타나면서 전대 연기론까지 제기되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중앙)이 1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당 대표 경선 출정식에서 추미애(왼쪽), 정세균(오른쪽) 의원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당 대표 3명·최고위원 10여명 출사표…당권 경쟁 돌입

뚜렷한 흥행 카드 없어 '그들만의 잔치' 전락 우려도

◇**당대표 경선 레이스 시작**=16일부터 당 지도부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어 오는 19일 제주도당 개편을 시작으로 20일 경남도당, 21일 부산시당 개편대회를 갖는 등 29일까지 16개 시·도당 개편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각 시·도당 개편대회에 참석, 당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 같은 전대 일정이 확정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권 주자로는 정세균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데 이어 정대철 상임고문이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추미애 의원도 16일이나 17일에 출마를 선언한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당 정체성을 살리는 실질적 창당에 집중하겠다며 출마 결심을 접었다.

◇**최고위원 10여명 도전**=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10여명 가량이 도전장을 내밀거나 내밀 예정이어서 누가 1위 최고위원이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역 의원으로는 송영길 의원이 일찍부터 출마준비를 해왔고, 문학진 의원도 지난 12일 출사표를 던졌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한 김진표 의원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유일하게 최고위원에 출마한다.

영남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조경태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정세균, 추미애 의원과 정대철 고문 등 3파전으로 전개되는 당 대표 경선은 1인 1표 방식이지만 10여명이 맞붙는 최고위원은 1인 2표 방식이어서 최고위원 후보와 당 대표 후보 간의 짝짓기와 합종연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 되나**= 쇠고기 정국과 노동계 하투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다, 경선이 계파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민주당 전당대회는 자칫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더욱이 영남권 인사들은 대의원 선정 방식에 반발, 7·6 전당대회 '보이콧'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지도부가 대의원 1만2천명 중 60%를 245개 지역구에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40%는 총선 당시 지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게 발단이 됐다.

이로써 정당 득표율이 높았던 호남권에는 2천288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반면 인구 수가 훨씬 많은 영남권에는 1천929명이 배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캐스팅보트' 구 민주계 몸값 상종가

전대 투표권 30% 배정…합종연횡 대상 1순위

통합민주당 7·6 전당대회에서 구 민주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선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 민주계 현역 의원은 9명에 불과하지만 전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의 30%가 구 민주계에 배정되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 대상의 일순위가 된 때문이다.

구 민주계 대의원은 당권 경선이 접전 양상으로 진행될 경우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1인2표제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난립이 예상되는 후보들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 민주계는 당내 소수파로 열린우리당계 대의원에 비해 결속력이 강한 만큼 영향력이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구 민주계에서는 박주선(광주) 의원과 정균환(전북), 김민석(수도권) 최고위원 등 3명이 지역 분할 형식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또 정세균, 추미애 의원과 정대철 상임고문 등 당권주자들은 당 대표 후보가 없는 구 민주계의 표심이 대표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위원장 경쟁 후끈

우윤근-주승용 의원 대결에 국창근씨 가세 '3파전'

광주시당, 김동철 의원 출마…아직까지 경쟁자 없어

통합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대의원 대회가 일주일 후로 다가오면서 시당위원장과 도당위원장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구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합당한 이후 공동위원장 체제로 유지돼 오던 시·도당이 처음으로 단일 지도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양대 세력의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당의 경우 이런 분위기가 확연하게 감지된다. 당초 민주신당 출신인 우윤근(광양) 의원과 주승용(여수시 을) 의원이 자천타천의 후보로 거론돼왔으나 최근 구 민주당 출신인 국창근 전 의원이 가세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 전 의원은 15일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과 총선에서 분열된 민심을 추스르고 전남도당의 현안을 해결, 2010년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과 주 의원은 16일 저녁 서울에서 전남지역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들은 뒤 도당위원장 후보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현재까지 김동철(광산구 갑)의원만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총선 직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나눠먹기 폐단, 광주시의장 선출 공약 발표 등 투명한 절차 거쳐야"

광주 시민단체들 시의회에 촉구

광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의장단 선출은 의원 모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돼 특정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에 선호 후보에게 기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을 따르는데, 지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책과 의정 활동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의원들간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자리 나눠먹기 등의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경실련은 15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지역 현안 및 의회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광주시의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의장단 선출 방식 등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여부,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광주시의회가 지난 2년간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등을 감시· 분석한 의정 활동 평가도 공개할 계획이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후반기 의장단은 시민 대표로서 신뢰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면서 "의장단 후보로 나서는 시의원들은 광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신 광주시의원 등 의회 내부에서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후반기 의장이 되기를 원하는 의원들은 출마의사를 소신 있게 밝히고 공개 토론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정책을 발표하는 등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 의원 등은 "현행 의장 선거 방식은 공약을 발표할 기회가 없어 입후보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의회를 이끌어 나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등을 지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만큼 공개 선거운동 방식으로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검토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탕평책만이 유일한 난국 돌파 해법"

호남 출신 비례대표 한나라 이정현 의원 주장

이명박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출신 비례대표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15일 국체(國體)와 신체(身體)를 비교하며 탕평인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올린 '난국 해법은 탕평책 뿐'이란 글에서 "간이 아프고 콩팥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게 되듯 국정수행에 있어 소외는 아무리 소소해도 국가와 국민을 같이 아프게 한다"며 "인사든, 정책이든, 정치든 의리보다 공정을, 편중 보다 대통합을 취하는 탕평책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요즈음 일부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공통 된 분위기는 지역발전과 인사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라고 호남 민심을 소개한 뒤 ▲한 공기업에서 기획상무이사를 뽑는데 지원자 중 10년 이상 그 회사에 기획업무를 보면서 최고 반열에 오른 인사는 자신이 유일한데도 출신지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 사례 ▲한 부처에서 실무 국장 3명이 공교롭게 특정 지역 출신이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한 명이 한직으로 나간 경우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내외 노동 행정기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노동법 전문가가 출신지 때문에 해당 분야 기관장 공모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감히 우리 한나라당 정권의 모든 인사권자와 대통령, 청와대 인사비서관, 장관, 공기업 사장, 지자체장에게도 부탁한다"며 "특정지역 사람들이 또 다시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을 갖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90% 대의 결속을 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탕평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탕평책은 가장 큰 개혁이고 통 큰 화합책이며 국민의 역량을 한데 모을 유일한 비책"이라며 "이를 감시할 것이고 사례가 있을 때마다 현장조사를 나가고 공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